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금융은 **통통**하게 소비자는 **행복**하게

보도	2025.6.16.(월) 조간	배포	2025.6.13.(금)	
담당부서	민생침해대응총괄국 불법사금융대응3팀	책임자	팀 장	천성준 (02-3145-8280)
		담당자	선 임	김유진 (02-3145-8281)

SNS로 불법채권추심을 당하고 계신가요? 금감원, (주)카카오와 협력하여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!

– 금감원·(주)카카오, 불법 채권추심 등에 이용된 카톡 계정 차단 시행(6.16.) –

《 주요 내용 》

- 불법사금융업자의 접근채널이 전화·문자메시지에서 SNS로 전환되는 추세이며, 특히 SNS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.
- 이에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은 (주)카카오와 협력하여 6.16(월)부터 불법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중지*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.
 - * 신고된 불사금업자의 계정(ID)은 금감원·카카오의 심사를 거쳐 이용중지 처리
- 금번 카톡 계정 이용중지 제도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확대*(7.22 시행 예정)와 함께 민생침해 금융 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서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 - *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가 운영중(14.10월~)이며, 대부업법 개정(25.1월)으로 이용중지 대상이 불법 대부행위(최고금리 초과 등) 및 불법 채권추심 행위까지 확대 예정

< 소비자 유의사항 >

- 카톡으로 “협박·야간 추심,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리 변제 요구 등”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한 경우, “카카오톡 어플 내 신고 기능”을 활용하여 신고하세요! (☞ 자세한 신고 방법은 [붙임1] 참조)
 - * [신고방법] 친구 목록에서 삭제 → 채팅창 우상단 클릭 → 신고하기 클릭
- 거래전 우선 상대방이 합법적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하세요!
 - * 지인 연락처나 사진, 주소록 요구시 불법추심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상담중지
- 추가적인 불법추심피해 등 발생(우려 포함)시 금감원(☎1332→3번)·경찰(☎112)에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이용하세요!

1 개 요

- 금융당국은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를 운영중이며, 대부업법 개정('25.1월)으로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이 불법 대부 행위 전반 및 불법 채권추심 행위까지 확대될 예정(7.22. 시행)입니다.
 - 그러나, 최근 불법 채권추심 과정에서는 주로 SNS가 활용되고 있어 “**실질적인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죄수단 차단**”을 위해서 **이용중지 대상 채널을 확대**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.
- 이에 금융감독원은 (주)카카오와 공동으로 불법사금융업자의 “카톡 계정 이용중지” 방안을 마련하였고, **6.16(월)부터 제도가 시행**될 예정입니다.
 - 카카오톡을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 시, **카톡 어플**을 통해 **즉시 신고***가 **가능**(6.16(월))하고, 7월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
 - * [신고방법] 친구 목록에서 삭제 → 채팅창 우상단 클릭 → 신고하기 클릭(붙임1 참조)
- ※ **신고자의 익명성**이 **보장**되므로 **2차 가해**(가족·지인 추심 등)의 우려 없이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.

2 신고 대상 불법 대부·채권추심 유형 사례

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욕설 등 협박을 하거나 반복·야간 연락하는 행위

- 채무자 또는 관계인(가족·지인·직장동료 등)에게 욕설 등을 사용하며 협박하거나 반복적·야간에 연락하는 행위는 **불법 채권추심 행위**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.

[채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욕설 등 협박을 하는 사례]



[관계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반복·야간 연락하는 사례]

채무자에게 반복 연락하는 사례	채무자의 형에게 야간에 반복 연락하는 사례

②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의 대리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

- 채무자 외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의 대리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**불법 채권추심 행위**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.

[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채무 대리 변제를 요구하는 사례]

아버지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	누나에게 채무를 대리 변제할 것을 요구

③ 등록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카톡으로 차용증 등을 요구하며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

- 등록 대부업자가 아님(불법사금융업자)에도 카카오톡으로 차용증 등을 요구하며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는 **불법 대부행위**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.

[불법사금융업자가 카카오톡으로 차용증을 송·수신하는 사례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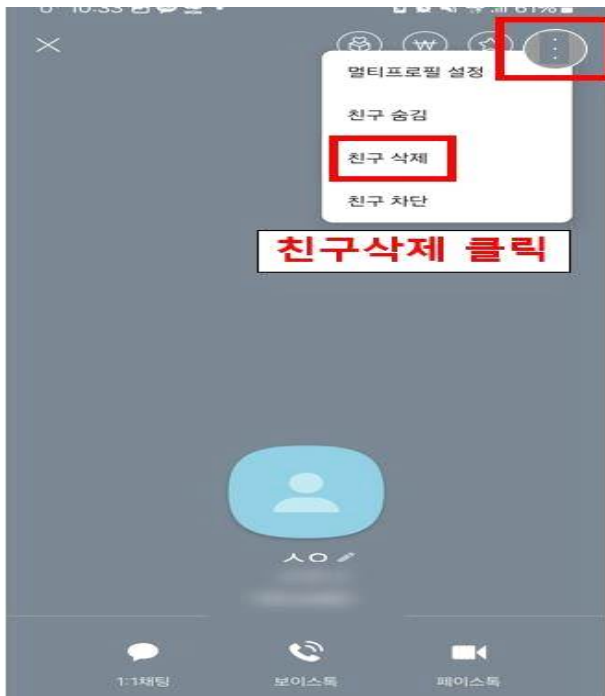
3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

- 카톡 계정 이용중지 제도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확대(7.22 시행 예정)와 함께 민생침해 금융 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서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업자의 영업행태 등을 모니터링 하고,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제도를 지속 개선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사후 구제를 위해 힘쓰겠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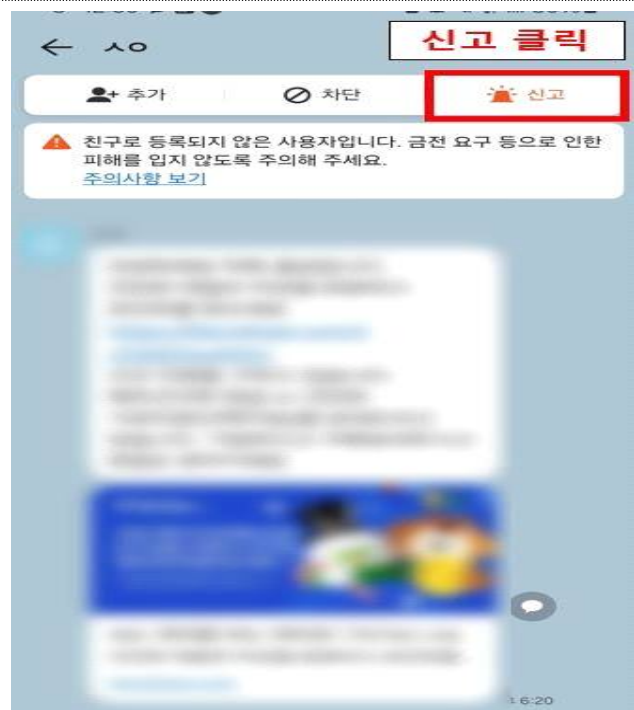
붙임1

카카오톡 신고 방법

[1단계] 친구 프로필 우상단 "점세개"
→ "친구 삭제" 클릭



[2단계] 채팅창 우상단에 "신고" 클릭



[3단계] "불법 상품·서비스" 클릭



[4단계] "접수하기" 클릭



☑ **거래상대방이 합법적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 후 거래하세요!**

⦿ 합법적인 등록업체 여부*를 확인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명심해야 합니다.

*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(fine.fss.or.kr → 금융회사 정보 → “대부업체 조회”)

⦿ SNS(카카오톡, 텔레그램), **오픈채팅** 등을 통한 연락은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고, 추적이 곤란하므로 먼저 연락을 취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.

⦿ 특히, **지인 연락처나 사진, 주소록 요구시 불법추심**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즉시 상담을 중지하셔야 합니다.

☑ **카톡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한 경우 카카오톡 어플 내 신고기능을 활용하여 적극 신고하세요!**

⦿ 카톡으로 “**협박·야간 추심,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리 변제 요구 등**”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한 경우, “카카오톡 어플 내 **신고 기능**”을 활용하여 신고하세요!

☑ **불법추심 피해발생(우려)시 금감원·경찰에 신고하세요!**

⦿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**금감원**(☎1332→3번)·**경찰***(☎112)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피해 구제 및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가능하게 합니다.

*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·지구대·파출소 등을 통해 신변보호 신청

☑ **고금리, 불법추심 피해발생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하세요!**

⦿ 대부업자(등록·미등록)로부터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‘**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**’를 신청*하세요.

*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로 접속 후 ‘민원·신고’ → ‘불법금융신고센터’ → ‘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’

□ **불법 대부·대부중개 서비스**

□ **불법 채권추심 행위 <'25.6월 추가>**

카카오톡은 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는 방식의 채권추심 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. **이용자 또는 기관 신고 등을 통해**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하여, 카카오톡을 이용해 불법적인 방식으로 채권을 추심하거나 이를 알선 조장 유도하는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**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.**

-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거나 위계(거짓, 기망, 속임수)를 사용하는 행위
-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(오후 9시~오전 8시)에 메시지, 카카오톡 내 통화하기 기능 등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행위
-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
-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
- 채무자 외 제3자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
-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자들을 그룹채팅방에 초대한 후 채무자의 채무금액,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
-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
-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
- 법원, 검찰청,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프로필을 사용하여 추심 행위를 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
-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
- 채권추심에 관한 민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
-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
-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그룹채팅방에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
- 그 외 관계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